

#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엄중...대립 바람직 않아”

### “검찰개혁은 국민 뜻...법무부·검찰 속도 내달라” 수보회의 주제 자리서 대규모 집회 관련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

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장관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견표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쳐

보·혁 대립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

일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언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 격렬해진 조국 국감...법사위 ‘난타전’

### “탄핵 촛불혁명 부활” vs “조국 지키기가 개혁이나”

국정감사가 7일 중반으로 향하면서 여야의 ‘조국 대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 집회를 2016년 탄핵 촛불집회와 연결하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란음모·체제전복 세력’의 검찰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국회는 국감 5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검사의 통화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중앙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때맞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대책없는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철호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도 ‘조국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데 당력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장소만 서초동일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라고 말했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안법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오히려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으로 오해한다”면서 “대놓고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이 집권 세력(야말로 내란음모·체제전복 세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야 3당, 검찰 개혁법안 조속 논의 공감

###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조국 국조·특검엔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세 원내대표가 회동 후 각각 기자회견과 만나 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 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니 10월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8~29일께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해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쟁점 민생법안과 관련,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고 했다”면서 “다음주부터는 그런 것을 실질화하고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듭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와 관련, “이번 달 안에 관련 법 발의가 가능하냐고 의사를 물어봤는데 한쪽은 곧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한쪽은 국정조사랑 연계가 되고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 자녀 입수 전수조사에 대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국조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 의장·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 신설

### 검찰개혁·선거제 논의... “정치현안 최고위급 회의”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문제를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

명과 초월회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날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날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으며, 오늘 문화상 국회의장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치협상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정례·수시로 진행하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우선적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첫 회의는 문 의장의 해외 출장(13일) 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이 회의는 당면한 정치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위급 회의”면서 “현안에 따라서는 정철위의장 등의 단위에서 실무 협의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장성토지 (급매)

####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 (앞면30m)

- ① 매매가 시세 10억 (1080평) → 7억 5천
- ② 평수(230평, 매매가 1억6천)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추천 물건

- ① 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9천5백만
- ②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 ③ 장성필림리(담)925평 → 매매가2억8천만
- ④ 담양읍메타세쿼이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 경매교육 [특수전문]

- ① 특수반 모집(매주 개강)
  -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② 매주 토요일
  - 기초무료교육 실시
- ③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태디
- ④ 경매투자 연30% 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 시 연 15% 가능

대신경매 010-4667-9820

### 경매물건 (추천)

#### 부동산 경매

〈아파트, 주택〉	아파트 - 광산구 삼각동 - 건물 59.89㎡ - 감평가 1억3천만 - 최저가 9천만	아파트 - 광산구 운남동 - 건물 49.69㎡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7천8백만	주택 - 동구 학동 - 토지 186㎡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7천만	주택 - 남구 백운동 - 건물 243.77㎡ - 감평가 3억1백만 - 최저가 2억1천만
〈특수 물건〉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64.0㎡ - 감평가 6억 - 최저가 2억6천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341.05㎡ - 감평가 8억2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다가구(원룸) - 서구 금호동 - 건물 373.58㎡ - 감평가 6억4천만 - 최저가 4억4천만	임야 - 광주 광산구 동산동 - 임야 3502㎡ - 감평가 1억5천만 - 최저가 1억만
〈매매 및 임대〉	장집지 - 남구 송하동 - 지분5481㎡ - 감평가 18억1천만 - 최저가 12억6천만	토지 - 전남 장성 삼서면 - 농지 2079㎡ - 감평가 7천만 - 최저가 7천만	다가구(원룸) - 경기 화성시 병점 - 건물 480.22㎡ - 감평가 10억2천만 - 최저가 4억9천만	속박시설 - 전남 함평 학교면 - 건물 2025㎡ - 감평가 25억3천만 - 최저가 9억월
용평동 원룸 매매 - 평 15개 - 월수입500만원 - 매매가 7억2천만원	치평동상가16층,80평 - 콜버스시영화관 바로앞 - 보2차단, 월150만원 - 매매가 1억6천만원	광산구 신정동 (부동산사무실코너) - 즉시입주가능 (관리비 무) - 보3책만월, 월25만	쌍암동 상가 (10층, 24평) - 총남 태안 읍면 - 건물 2308.03㎡ - 감평가 24억1천만 - 최저가 5억3천만	

◆ 기본권리 분석된 물건만 선별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 그밖의 물건(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010-6670-9800